무안공항 날개펴기 안간힘

불황·고유가 여파 운항 편수 대폭 줄어…저가항공 유치도 난항

정기노선 편수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가 저가항공사 유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과 고유가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이 '무안공항의 항공수요가 많지 않다'며 취항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23일 대한항공의 저가항공사인 '진에어'사를 방문, 무안~제주·김포·김해·양양 간 신규노선 개설방안을 협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진에어 측은 이날 "현재로서는 무안공항의 항공수요가 크게 부족해 당분간 취항은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내년 4월 항공기 운항대수가 5대에 이르면 그때 가서 취항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일본의 저가항공사인 'JEX'에 공문을 보내 무안~일본 오사카 노선 취항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남도는 내년 초 JEX가 서울에 사무실을 개소하게 되면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밖에 또 다른 국내 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을 상대로 신규노선 개설을 요청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저가항공사들을 상대로 무안공항의 잠재적인 항공수요와,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유가 등의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신규노선 취항을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24일 현재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는 대한항공의 상하이 노선과 아시아나항공의 베이징 노선을 비롯 동방항공과 남방항공의 심양, 장사, 상하이 노선 등 주 10편에 그치고 있다. 지난 5월 만하더라도 무안공항에서 매주 19편이 취항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 달새 무려 9편(47%)이 감소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취항한 뒤 매일 운항했던 동방항공의 상하이 노선은 지난달부터 주 2편으로 5편이 줄었고, 지난 3월부터 매주 2해 운항했던 대만 부흥항공의 대만노선은 아예 이달부터 운휴에 들어갔다. 심천항공도 무안~창사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사퇴 후 또 출마 선거비용 반환"

민주당 서갑원 의원 개정안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 후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비용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임기내 중도 사퇴한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내 중도 사퇴한 뒤 다른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직전 선거에서 돌려받은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최근 5년간 488개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실시됐고 이로 인해 468억원의 선거비용이 국회나 지자체에서 지출되는 등 문제가 많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각 선거 후보자들이 당선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경우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전액 혹은 반액 돌려받도록 규정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설

'민주주의 전당' 부지 광주 선정이 순리다

광주시가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활동을 본격화했다. 민주주의 전당 광주유치추진위원회(광주유치위)는 어제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방문해 민주주의 전당 유치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고 광주 유치의 당위성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민주주의 전당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상징하고 민주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심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활동, 국제교류 및 지원활동을 하게 된다. 건립 배경과 목적을 볼 때 광주만한 적지는 없다.

광주는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도시다. 항일 의병활동,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도시로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남북평화통일축전, 세계여성평화포럼 등의 국제행사를 개최한 소중한 경험도 있다. 민주주의 전당을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 건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주의 전당 건립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주주의 전당을 광주에 유치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사성과 상징성, 명분이 뚜렷한 만큼 공약은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

경계하는 것은 일부의 견제와 질시다. 일부에선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워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건립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는 없다. 광주유치위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유치에 성공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전당은 광주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

'농어촌 학교 마을도서관 사업'에 동참을

전남지역 농어촌 어린이와 주민에게 독서문화의 여건을 제공하고 도·농 간 지식 및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이 본격화됐다.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 (사)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 (주)NHN, 광주일보는 24일 전남도청에서 농어촌학교 마을도서관 조성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을 맺은 기관과 단체는 전남지역 농어촌학교 마을도서관의 확대·발전을 위해 예산 지원, 시설 제공 및 관리, 도서관 자료 확충과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홍보활동 등을 각각 전개하게 된다.

농어촌학교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은 공공도서관이 없는 농어촌의 학교 도서관을 마을 공동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도서관마다 3천여권의 책이 기증되고 야간에는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된다. 농어촌지역 어린이와 주민이 지식을 충전하고 의사를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탄생하는 것이다.

학교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깊다. 학교와 지역사회, 주민들을 한마음으로 묶어주는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양성과 도·농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삶의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책을 통해 얻는 감동과 경험은 지식의 폭을 더욱 넓히고 삶을 보다 풍요하게 해준다. 따라서 학교 마을도서관 건립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발전돼야 한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학교 마을도서관이 앞으로 면 단위마다 1개씩 들어설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학교 마을도서관이 농어촌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있도록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대한다.

"한미정상회담전 '30개월 이상 허용' 결정"

쇠고기 국조 변재일 의원 주장

"관계장관, 4월7일 대통령에 보고"

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개방 협상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수입 허용방침을 정했고, 이 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소속 변재일 의원이 이날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정부의 '4월 경제통상분야 추진계획'에는 '핵심 메시지'라는 항목으로 "미 의회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인준의 선결요건으로 주장하는 쇠고기문제의 조기해결이 필요하다"며 "(쇠고기 문제를) 미 의회의 한미FTA 조기 인준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문건은 또 '한미FTA 인준'과 '쇠고기 수입'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규정했으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주요 내용 및 기대·성과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미 FTA 인준과 관련해선 '미 의회 지도부의 한미FTA 연내 비준의 동력 확보'를 주내용 및 기대성과로 적시하면서 미국측 입장으로 "미국측도 동의하고 있으나 대통령 방미전 쇠고기 문제의 선결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대통령 방미 전인 4월 7일 청와대에서 농림부와 외통부, 지식경제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관련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추진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변 의원측은 전했다.

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식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OIE 기준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방침을 이미 정했다는 것은 사전에 한미간에 묵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방미 선물용' 의혹을 뒷받침해 주는 단적인 증거"라며 "농림부가 협상을 주도했다는 기존 정부 주장과 달리 이 대통령 등 청와대와 외통부가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베이징 올림픽 티켓 구매 장사진 2008 베이징올림픽 마지막 티켓 판매가 시작된 25일 한 중국인이 밤을 세워가며 구입한 티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매표소 주변은 티켓을 구하기 위해 이틀전부터 텐트를 치고 줄을 선 수천명의 중국인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연합뉴스

PD수첩 수사 검찰 29일 발표

정운천 "처벌 원한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임수빈 형사2부장)은 29일 자체적으로 재구성해 낸 PD수첩의 취재 원본 파일을 공개하는 사실상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그동안 수사팀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해 취재 내용의 90% 이상을 복원해 냈다"며 "이를 29일 언론에 공개하고 PD수첩 제작진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공개해 PD수첩이 취재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편집해 보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PD수첩 제작진의 입장 등을 공개 질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23~24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차관보)을 소환해 피해자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부단체장급 등 48명 인사

전남도는 25일 부단체장 및 준국장, 과장급 서기관 4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명단 4면〉

28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에서는 영광부군수에 최장주 과학기술과장, 완도부군수에 임정환 관광개발과장, 신안부군수에 유동수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이 각각 전출됐다.

또 고흥부군수에는 박래복 농산물유통과장, 장흥부군수에는 임태영 고흥부군수, 보성부군수에는 윤재영 세무회계과장, 장성부군수에는 박양종 행복마을 과장이 각각 발령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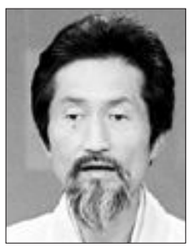
김재휴 보성부군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정책부장으로, 박만호 장흥부군수는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김용우 장성부군수는 중소기업설립종합지원센터 팀장으로 그리고 김판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정책부장은 전남테크노파크 경영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남도는 부단체장 인사교류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쳤으며,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해 부단체장이 도에 전입할 경우 도 본청 과장급과 수평적 인사교류를 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상반기 조직개편과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로 발생한 인사요인에 따른 것으로, 전문성을 살리고 조직 활성화와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민노당 새 대표에 강기갑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사진〉 의원이 25일 임기 2년의 새 대표에 선출됐다.

민노당은 이날까지 엿새간 진행된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96.1%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강기갑 후보가 68.3%의 득표율을 기록, 31.5%에 그친 이수호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연합뉴스

비리 광주시의원 28일 징계 논의

3분의 2 결의 땐 의원직 박탈…당사자들 반발

민주당이 광주시의회 김남일 의원과 김월출 의원을 제명키로 하고, 광주시의회도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당사자들은 "승복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본보 7월25일자 보도〉

광주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제172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위원회를 소집,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설립과정에서 거액을 가로채는 등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남일 의원과 성폭력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월출 의원 등 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사자인 김월출 의원은 "사실 규명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진행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주당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퇴를 요구해온 여성단체 관계자들을 고소해놓은 상태다.

김남일 의원측도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측은 특히 당적만 없어지는 민주당의 제명과 달리 시의회에서 제명 처리될 경우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소속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강인규 의원

나주시의회는 지난 25일 123회 정례회에서 후반기 의장에 재선인 강인규(53·사진) 의원을 선출했다.

강 의장은 전체 의원 14명 가운데 9명의 지지를 얻었으며 나익수 전 의장이 2표, 무효 3표 등이다.

부의장에는 3선인 무소속 정찬걸 의원이 뽑혔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원구성에 나선 나주시의회는 1개월여간의 파행을 접고 원구성을 마무리했으나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간 마찰은 물론 의정비 반납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그럼 뭐해, 메아리가 없는데…

기아차 영업수익 흑자로 전환

올 상반기 영업이익 2,189억 기록 … 2년간 연속적자 벗어

기아차가 고유가와 시장침체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천189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

기아차는 25일 올 상반기에 매출 7조9천138억원, 영업이익 2천189억원, 당기순이익 61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해 영업손실 554억원으로 2006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냈으나 올 들어 흑자경영을 달성했다.

기아차는 수출 감소로 상반기 판매대수가 지난해보다 6.6% 감소했고 매출액도 소폭 감소한 7조9천138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내수판매 증가·환율 상승·원가구조 개선 가시화 등에 힘입어 2천억원대의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특히 기아차는 올해 '모닝', '모하비', '로체 이노베이션' 등 세 차종을 출시하며 내수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상반기 내수판매는 15만3천817대로 전년동기에 비해 15.4% 늘었다.

해외시장에서도 15.8%의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판매는 '프라이드', '쎄라토' 등의 판매 호조로 진출 후 최초로 2%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했고, 중국시장 판매도 전년 동기에 비해 41.7%나 늘었다.

기아차는 하반기에도 프리미엄 준중형모델인 '포르테'와 소형 CUV '쏘울' 등의 신차 출시를 통해 흑자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